

유럽연합(EU)의 앞날과 세계경제

외스트림 필러

현재 유럽의 정치·경제구조는 2백여년간에 걸친 중단없는 산업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이는 20세기 유럽의 기초가 된 민족국가의 탄생을 가져왔다. 유럽의 민족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역할을 수행했다. 첫째, 산업화를 촉진시켰고, 둘째, 부를 창조하고 분배하기 위한 정치적 기구들을 구축하였으며, 셋째, 공산품 생산을 위한 노동의 국제적 분업을 심분 활용할 목적으로 정부간 협력체를 구성하였다. 산업화가 그 한계에 이르렀을 때 민족국가들의 존립이 위협에 처하게 된 것은 결코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산업화 사회는 脫산업화 사회(post-industrial society), 정보화 사회(information society) 등으로 불리우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나 자신은 물질적 재화의 생산을 지식이나 정보·서비스·오락 등으로 대체하는 데 역점을 두는 무형 또는 비물질적 사회를 더 선호한다.

민족국가들은 이러한 압력을 받아 그 기반을 잃게 되었다. 유럽연합(EU)이 민족국가들의 역할 가운데 일부를 승계했고, 나머지는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산업화시대 이전부터 잘 알려진 유럽의 지역들 몫이 되었다. 유럽의 국경을 초월한 지역들은 하나의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다.

미래의 유럽은 경제적 국제화, 문화적 분권화, 그리고 유연한 안보정책에 의해 그 모양새를 갖추어가고 있다.

유럽의 경제적 국제화는 단일시장 형성, 경제 및 통화 통합,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 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단일시장 형성에 대하여는 전통적 개념과 그다지 다를 게 없으므로 유럽의 기업들이 기술과 금융, 마케팅 등 분야에서 서로의 힘을 합

칠 수 있게 하는 중재역할을 수행한다는 점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덧붙일 것이 없다. 미국인들에게는 다소 이상하게 들릴 지 모르지만 단일시장이 이루어지기 이전의 유럽 기업들은 국내시장만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이제는 더이상 그렇지 않다.

둘째, 경제 및 통화통합은 장래 유럽통합을 위한 초석이다. 만약 경제 및 통화통합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진전되지 못한다면 지속적 통합의 희망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사실 경제 및 통화통합이 곧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그리고 이와같은 예측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지도 모른다.

우선, 통화의 안정은 곧 안보로 이어짐으로써 이 두 가지는 결코 나누어 생각할 수 없다. 어떤 나라도 이웃 나라들로부터 고립해서 통화안정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통화안정을 얻기 위한 독일의 노력은 곧 독일이 다른 많은 주요 유럽국들로 하여금 그 정책에 참여하게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 하겠다. 독일의 주변국 중 가장 중요한 나라는 프랑스이다. 독일의 통일과 독일 제조업체들의 경쟁력 저하는 독일이 홀로 통화안정을 추구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충분히 강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한다. 이 점은 통계수치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독일은 GNP의 1%에 이르는 경상수지 적자를 감수함으로써 2~2.5%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독일의 경상수지 적자의 對 GNP 비율은 상승추세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경제 및 통화통합(EMU)은 독일경제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도래할 것이다.

아울러, 유럽인들은 궁극적으로 주요 경쟁자들보다 훨씬 높은 실질이자율과 환전비용 등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국제적인 경쟁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유럽인들의 이윤이 낮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투자 저하와 이윤 감소가 나타나게 되고 따라서 생산성 또한 낮아지게 된다. 이 점이 바로 유럽 기업들로 하여금 경제 및 통화통합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이유이다.

세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이다. 여러분들은 유럽을 서로 잇는

거대한 투자계획인 TEN(Trans European Network)에 대해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는 그 자체가 하나의 공적이라 하겠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반 설비, 즉 우리가 소프트웨어 인프라스트럭처(soft infrastructure)라고 개념짓는 경제의 무형 물질적 부분에 대해 유럽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통신망을 비롯, 다양한 서비스산업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대중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었으면서도 동시에 개인 기업들을 변화시킴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했던 로마제국의 도로, 수도와 같은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진정한 소프트웨어 인프라스트럭처란 교육과 보건, 환경, 낮은 범죄율, 문화시설 등으로 이러한 간접자본들은 무형의 물질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매력을 더해 줄 것이다. 이는 또 미래의 경쟁력을 제고함에 있어 결정적인 매개체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서 문화적 분권화 문제도 대두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국제화와 문화적 분권화를 개념상 서로 양립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들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것이다. 경제적 국제화는 민족국가의 힘을 침식하고 있는 문화적 분권화 노력을 제어할 수 없게 하였다. 문화적 분권화는 다국적기업들의 지방화 현상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민족국가들로부터 빼앗아간다. 많은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운용됨과 동시에 지역사회에 강하게 연계됨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는 반면에 민족기업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문화적 분권화가 기업경영에 대하여 미친 간접적인 영향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지방분권의 자유가 이제 일상사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기업들은 투자지역으로 더이상 나라를 선택하지 않으며, 그 대신 지역 또는 지역공동체를 선택한다. 하나의 예로서 다이믈러 벤츠(Daimler-Benz)社は 그들의 새로운 공장을 프랑스에 짓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로레인(Lorraine)지방에 대한 투자를 결정했던 것이다.

이와 함께 유럽지역에서 5개의 국경을 초월한 지역들이 부상하고 있다. 즉 ① 발틱해 연안, ② 비엔나 - 부다페스트 - 프라하를 잇는 삼각

지역, ③ 서독과 동독을 둘러싸고 있는 라인강 양편, ④ 북동부 스페인과 남서 프랑스 - 피레네산맥 지역, ⑤ 북서 이탈리아와 남동 프랑스(알프스) 지역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지역들은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에게 천연의 뼈대 역할을 하고 있다. 발틱 지역의 경우 이들은 코펜하겐에 본부를 두고 있고, 삼각지역은 비엔나에, 그리고 라인계곡은 슈트라스부르크 또는 슈트트가르트에 본부를 두고 있다. 또 피레네 산맥지역은 바르셀로나에, 알프스 지역은 리옹과 토리노 및 밀라노에 본거지를 두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이들 도시들을 향후 수세기 동안 잠재력이 높은 도시로 지목한 최근의 지리학 연구에도 잘 부합되는 것이다. 국내자본만으로 경쟁을 하기란 차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민족국가들은 더이상 하나의 경제독립체로서 존재하기가 어렵게 되고 있다.

정치적 개념으로서의 민족국가는 지역들에 대한 통제력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이미 느슨한 연방제이고 프랑스는 지방분권화 되고 있으며, 스페인은 카탈로니아 지역의 중요성을 점차 인식하고 있다. 영국도 스코틀랜드의 정치적, 문화적 중요성과 함께 웨일즈 지방에 대한 중요성을 점차 받아들이고 있다.

각 지역이 민족국가들을 받아들인 것은 민족국가 형태에 따름으로써 받게되는 경제적 장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산업화가 무형적 사회에 의해 대체됨에 따라 이들 국가형태가 갖고 있던 경제적 장점들은 사라져갈 것이다. 만약 민족국가가 아무런 가시적인 경제적 장점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우리 고대문화의 독자성을 위협한다면 우리가 왜 민족국가에 소속되어 있어야만 하는가?

얼마 전까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민족국가가 우리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냉전체제가 끝난 지금 이 대답은 설득력을 잃고 말았다.

오늘날 유럽의 안보문제는 지난 5~1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엄청나게 바뀌었다. 사실 오늘날 유럽은 분명히 다른 두 가지 안보문제를 안고 있다. 하나는 소수 민족 및 문화적 소수층들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대부분 중앙 및 동유럽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고, 둘째는 독일과 러시아 사이

에 위치한 중앙 및 동유럽의 중소 민족국가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위협이다. 이들 두 가지 안보정책문제는 각기 그 특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겠지만 이를 분석해 보면 두 가지 경우 모두 유연한 안보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인종, 그리고 문화적 안보문제는 유럽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 세 위대한 왕조 - 합스부르크 왕조,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멸망된 로마노프 왕조, 그리고 오트만 왕조 - 는 500여년 이상 중앙 및 동유럽 민족들을 사정없이 황폐화시켰다. 북쪽으로는 핀란드로부터 남쪽으로는 그리스에 이르는 약 500 마일에 걸친 지대에는 25개 나라, 25개 민족이 25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는 잘 구획지어진 서양 장기 판 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인상과 그림과 같은 형상을 띠고 있다. 우리는 지질학을 통해 거대한 지층이 만나는 곳에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는 오늘날의 유럽도 마찬가지다. 충돌의 위험은 세 왕조가 인종과 문화적 긴장을 야기시키면서 부딪쳤던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전통적인 군사적 수단은 거의 쓸모가 없어졌다. 군사력으로 자기영토를 지키는 데 역점을 두었던 재래식 안보정책은 이제 사라졌다. 인간관계 즉 경제적, 상업적, 문화적 방법에 의해서 인근 지역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새롭고 유연한 안보정책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인종적, 그리고 문화적 대격변을 겪기 쉬운 이들 지역을 안정시킴으로써만이 우리는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경제개혁은 성장과 국제교역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최근의 각종 통계는 매우 고무적이다. 이와 아울러 비록 미래에 대하여 아무런 보장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가 확고히 그 뿌리를 내려야 한다. 소수민족의 권리도 비교적 잘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래에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민족과 문화의 잠재적인 갈등 돌출을 억제하여 왔다. 중앙 및 동유럽 국가들은 만약 그들이 이러한 잠재적 갈등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게 되면 유럽연합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요원하다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다. 유럽연합의 존재 그 자체, 그리고 그 문호가 활짝 열려져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는 지난 5년간 유럽에서 추진되었던 안보정책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940년대 후반 바다를 확보하고자 하는 야심에 차 있던 소련을 막아내기 위해 만들어진 안보정책은 지난 40여년간 성공을 거두었으나, 독일과 러시아 사이에 존재하는 중소 국가들이 안고 있는 오늘날의 문제를 풀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유럽연합을 3개의 발틱 국가들과 6개의 중앙 및 동유럽 국가들(슬로베니아를 포함)로 확대하는 것은 유럽연합의 국경을 동유럽 깊숙히 밀어 넣음으로써 불안정한 완충지대를 제거할 수 있고 또 새로 태어난 러시아의 이웃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유럽연합에의 합류는 흩어진 대포를 포대에 정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유럽연합의 회원이 되는 것이 곧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군사 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보 보장의 뜻을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잠재적 위협이 완충지대 속의 개별 국가들이 아니라 유럽연합 회원국가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 곳에서의 침략의 발단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한 정책은 네 이웃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터키, 북아프리카 - 에 대한 유럽의 대답을 요구하고 있다. 그 대답은 미리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유럽연합은 유연한 안보정책을 거듭 추진해나감으로써 그 답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대해 하나의 특권있는 파트너로 점차 보여지게 될 것이다. 러시아는 항상 서유럽에 지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으며 조만간 강력한 힘을 다시 보유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러시아는 75년전 터키의 모습과 같다.

이는 왕조의 핵심은 왕조와 관계된 책임을 맡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터키는 유럽연합과 협력협정 및 관세동맹을 맺고 있다. 유럽연합은 터키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외부에 남겨두어야 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또 만약 그렇다면 개별 국가로 남아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되는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요청이 무슨 이유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인지 등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는 외교정책을 펼 필요가 있지만, 이를 위해 유럽연합은 물론 미국도 아직 외교관계를 제의한 바는 없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다시 태어날 보다 강대해진 러시아의 일부로 되돌아간다면 전략가들은 상황을 다시 계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 나라 모두에 대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강경한 안보정책은 그 대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유럽은 안정을 도모하여 정치적, 경제적 개혁을 증진시키도록 유연한 안보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물론 쉬운 과업은 아니다.

1997/1998년 개최될 정부간 회담에서는 하나의 의제가 다른 모든 논의사항들을 압도함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발틱 국가들과 중앙 및 동유럽 국가들, 그리고 사이프러스와 말타 등에 이르기까지 유럽연합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회담에서 논의될 내용들이다. 따라서 회담은 비록 명백하게 선언되지는 않았지만 차세대에 있어서의 유럽 안보에 대해 다루게 될 것이다. 유럽인들은 주로 중앙 및 동유럽이 안고 있는 안보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럽연합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만약 희망대로 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5~10년 안에 개신교 또는 카톨릭을 신봉하는 거의 모든 유럽국들에게까지 확대된 유럽연합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문화는 추진력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될 것이다. 물론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 정교에 집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이며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도 회원국 후보명단에 들어 있다.

따라서 문화는 결정적인 막후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문화는 유럽연합의 경계선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럽의 민족국가들로 하여금 지역 또는 국경을 초월한 지역으로 헤쳐모이게 하도록 만드는 데 사용될 강력한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문화는 비물질적 시대에 있어 결정적인 경쟁적 매개체로 경제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국제화시대에 있어 이러한 고려는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는 이러한 현상이 오직 유럽에만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전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문제이다. 먼저 미국의 예를 생각해 보자. 버몬트주는 남부 캘리포니아와 얼마만큼 유사하며 캘리포니아

주는 그 응집력이 얼마나 강한가? 이러한 질문들로부터 모델의 몇가지 기본적 특징이 미국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게 된다. 만약 캐나다와 멕시코를 포함시킨다면 '북미'라는 단어가 더욱 주목을 끌게 된다. 한편 유럽의 구도와 몇가지 유사점을 보이고 있는 인도는 어떻게 될까? 중국은 표면상 응집력이 강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실제로는 분권화를 위한 강한 욕구를 엿볼 수 있다. 반면 일본은 아마도 가장 안정적인 주요 민족국가일 지 모른다.

두번째는 이것이 떠오르는 국제정치 구도에 걸맞는 새로운 유럽의 정치적·경제적 구도인가 하는 것이다. 힘이란 누군가로 하여금 그가 애초에 계획하였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하게끔 하는 능력이다. 이것이 학교에서 배우는 힘에 대한 정의로서, 우리가 힘의 존재를 즉시 알 수 있는 바로 그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제적 힘의 게임에서 우리는 그 단어의 뜻을 조금 바꾸어야 한다. 즉 힘이란 다른 나라나 나라들로 하여금 다른 나라나 나라들, 또는 국제기구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바꾸도록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군사적 벡터와 금융적 벡터, 그리고 이념·규범·가치체계 등의 문화적 벡터 라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1945년부터 1989년까지 전후 시대에는 이들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미국이라는 한 나라에 의해 좌지우지되었으나 이제는 더이상 그렇지 않다. 군사적 벡터는 여전히 미국이 장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미국 대통령의 손안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에서는 군사적 벡터가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큰 영향력을 나타내지는 못할 것이며, 위기나 충돌 등의 해결을 군사적 해결로 도모하려는 경향도 줄어들 것이다.

금융적 벡터는 태평양을 건너 극동아시아로 옮겨간 것처럼 보인다. 이들 지역은 높은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고 높은 저축률과 연구 개발을 위한 막대한 투자 등이 이들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적 벡터는 언어, 종교 등에 역점을 둔 문화적 분권화에 의해 자극된 유럽에서 그 뿌리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인들에게는 불공정하게 들릴 지 모르지만 미래의 국제 파워게임은 민족국가들에서가 아니라 국가를 초월한 기업들과 여러 나라에 걸친 경제구심체들에 의해 이

루어지게 것이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모순들은 바로 이러한 사실로서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미국 기업은 진실로 잘하고 있으나 이것은 그들이 미국기업처럼 행동하지 않고 국제기업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한편 미국기업은 미국 경제가 약해짐에 따라 강해질 수 있다. 연예산업의 많은 부분은 미국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그들이 국제적인 경영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민족국가는 국내 생산, 국내 시장, 민족 문화 등과 같은 민족의 격리를 초래하였다. 산업화의 후반기에는 통제된 형태의 국제화가 도입되었으나 주로 제한된 경제적 목적을 갖고 있다.

이제 우리는 진실로 국제화된 세계에 들어섰다. 국내 기업들은 다국적도, 국가간도 아니며 어느 특징 민족국가에도 뿌리를 내리지 않은, 즉 국경을 초월한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권력의 중심도 더이상 국경에 의해 한정되지 않는다. 나는 차세대에 있어서 개인과 가정생활이 언어나 종교 등에 바탕을 둔 그들의 고유한 문화적 특징을 찾아 이를 통해 지배하고자 하겠지만 경제력과 사업부분은 초국경, 그리고 국가간 매개 변수에 의해 형성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예언할 수 있다.

심각한 문제는 명백히 양립하기 어려운 경향들이 다가올 비물질적 사회에서 서로 어우러질 수 있겠는가, 또 우리가 경제와 문화 사이의 충돌에 직면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금세기말은 인류 문명에 있어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우리는 유럽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관찰함으로써 어떤 지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은 산업화가 시작된 곳이고 또 본래 민족국가의 요람이었다. 따라서 기존의 추세에 강력히 맞설 새로운 경향이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보다 유럽에서 더욱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유럽통합은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공룡과 같은 형태가 아니다. 그것은 강력하며 국제적 중요성을 수용할 수 있는 비물질적 사회라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적 경제적 구조를 태동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산업경제로부터 비물질사회로 이전되는 과정을 특징짓는 경향들은 아

시아와 유럽국가들에게 긍정적인 것 뿐만 아니라 덴마크나 한국과 같은 중소국가들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다국적기업과 국제적인 경제중심체들의 출현은 세계경제에서 민족국가가 차지해온 중요성을 희석시켰는데 이는 중소국가들에게는 유리한 것이지만 거대한 민족국가들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할 것이다.

한국과 덴마크는 경제적 국제화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수많은 기업들을 이미 갖고 있다. 한국과 덴마크는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출현하고 있는 국가간 경제중심체들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 덴마크는 라인강 지역의 강력한 센터에 인접해 있고, 한국은 강력한 일본 및 중국과 인접해 있으며 그 자신이 북동아시아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구상을 발전시키고 있다. 한국의 이러한 구상은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그 결실을 맺어 한국의 경제력을 더욱 성장시키게 될 것이다.

비물질적 사회의 출현은 경쟁적 파라메타의 이동을 의미한다. 나는 이미 사회간접자본, 특히 소프트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를 언급한 바 있다. 인력자원을 개발하는 것 또한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비물질적 사회와 비물질적 경제는 바로 인력자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과 아시아는 인력자원을 잘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유럽의 TEN(유럽간 네트워크)과 한국을 포함하여 아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간접시설들에 대한 다양한 개발노력은 바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또 한국과 덴마크는 산업국에서 비물질적 경제로 이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의 공급체로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다. 한편 기업들도 비물질적 경제에 의해 경쟁의 내용이 경제적 변수로 부터 문화에 대한 비용으로 바뀔 것임을 이해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산업경제로부터 비물질적 경제로 변화되는 것은 유럽과 아시아, 특히 덴마크와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심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래야만 하는 좋은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과 덴마크는 모두 그러한 활용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토 론

질 의 김도훈 박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유럽통화통합(European Monetary Union)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안정적인 독일경제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만, 필러 장관께서는 오히려 독일경제가 약해진 것이 유럽통화통합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반된 견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답 변 필러 장관

한 나라가 진정 강력하다면 그 나라는 다른 나라의 도움이 없이도 독자적으로 모든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그러한 강력함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힘을 빌어야 할 것인 바, 독일의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됩니다.

20~25년전에 독일은 다른 유럽국가들과는 상관없이 낮은 인플레이션에 힘입어 통화의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동·서독 통일비용 때문에 독일은 이러한 부담을 독자적으로 감당할만한 힘을 상실한 것입니다. 만약 1970년대,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 중반 독일의 경제성장률을 국제수지와 비교해 보면 과거의 흑자기조에서 최근에는 적자로 돌아선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독일은 통화안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독일과 함께 그 정책목표를 지지하고 함께 공유할 유럽연합의 다른 6~7개 국가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독일은 통화의 안정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업부문—독일기업들—이 경제 및 통화통합을 바라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경제 및 통화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독일기업들은 그들의 경쟁자들로부터 더욱 압박을 받게 됨으로써 국제경쟁을 헤쳐나가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 의 이상설 사장(월정 인터내셔널)

제 첫번째 질문은 APEC 활동과 ASEM에 대한 유럽인의 견해와 ASEM 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은 유럽연합내에서 덴마크의 특별한 역할은 무엇인가입니다. 덧붙여서 동아시아와 유럽연합의 관계에서 우리는 자유무역지대나 그것과 비슷한 내 실있는 결과물들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답 변 윌리 장관

APEC에 대한 유럽인들의 태도와 관련된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럽인들도 외부로부터의 방해없이 통합과 협력을 이루어나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국가들이나 국가군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APEC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협력의 형태를 결정해야 할 것이고, 유럽은 그러한 협력의 형태나 내용이 무엇이 든 기꺼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ASEM에 대해서, 나는 많은 유럽인들이 그것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 졌다고 말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시아나 유럽 양측 모두 서로 친숙해지 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그 결과 아시아와 유럽일부에서 경 제적 발전에 대한 오해가 있어왔던 것입니다. 유럽일부에서는 아시아인 들이 유럽통합에 보다 높은 인식을 했어야 했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 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시아 기업들에 대한 관점을 제고시켰습니다. 따 라서 많은 유럽인들은 ASEM이 유럽과 아시아가 함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ASEM이 제도화된 기구(constitutional framework)로까지 발전하지는 않겠지만 기업들이 만 들어가야할 그 과정에 정치적인 자극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덴마크의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나는 덴마크가 경제력 이상으로 경제통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덴마크 국민들은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좋아합니다. 5 백만의 인구를 가진 조그만 나라인 덴마크가 어떻게 국제무역정책에 대

처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단일시장이나 공동의 농업정책이 없이는 덴마크가 생존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국민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은 사실상 이 유럽모델이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것—문화적 특성을 보호할 권리를 가지면서 국제경제에 참여하는 것—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몇 차례에 걸친 여론조사에서 덴마크 국민의 2/3 이상이 유럽연합의 일원이 되는 것에 찬성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한계들은 존재합니다. 우리는 방위협력에는 회의적이며, 몇 가지 다른 종류의 협력들도 다른 국가들이 원하는 것 보다는 완만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분간 경제 및 통화통합에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만 다른 국가들이 그것을 수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세계, ASEM내에서의 유럽과 아시아의 역할에 대해서 나는 그것이 일차적으로 정치적인 신호와 같은 것으로서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관계의 발전을 위한 영역을 확대해 줄 경영자들이나 의사결정자들에게 충분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자유무역지역으로 발전될 수 있거나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확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자유무역지역에 대해 언급할 때 때때로 세계무역기구(WTO)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몇가지 원칙들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나의 입장은, 대부분의 유럽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ASEM은 아래로부터 발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업들이 협력하도록 자극함으로써 시장을 개방함은 물론 아시아 기업들과 유럽 기업들의 합작투자 가능성을 형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제도화된 기구로 발전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유병호 박사(한성대 교수)

지정학적인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 그리고 덴마크는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 초강대국들 사이에 위

치해 있는 소국입니다. 반면에 덴마크는 유럽연합에 소속되어 있으나 한국은 어떠한 지역연합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덴마크와 비교해 볼 때, 한국의 가장 바람직한 생존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필러 장관

이것은 비교적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덴마크와 한국과 같은 국가는 그들의 전략적 외교정책문제를 쌍무적으로 해결할 지, 또는 다자간에 해결할 지를 먼저 결정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선택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덴마크는 다른 국가들이 우리를 위해 그러한 결정을 행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그 결정은 다자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여러 세기동안 스웨덴과 독일 등 매우 강력하고 공격적인 민족들 사이에서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현재의 유럽정세에서 우리가 독일과의 관계를 쌍무적인 것으로부터 다자간의 틀로 높일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한국에게는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이와 같은 선택이 주어지지 않았을지 모르나, 다행스럽게도 사태는 그리 멀지않은 미래에 한국이 그러한 선택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진전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쌍무적 또는 다자간의 기초 중에서 어떤 것을 기반으로 주변국들과 경쟁해 나갈 것인가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추천하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없이 최적의 모델은 다자간모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다국적기업과 초국적 중심(transnational centers)이 있는 세계에서 쌍무적 모델을 위한 공간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유럽이 민족국가로부터 유럽연합으로 도약하려는 이유입니다. 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기초위에서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점은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한국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비록 한국이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질 의 윤영오 박사(여의도연구소 소장)

유럽운동(European Movement)과 보수-자유 이데올로기 스펙트럼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또 필러 장관께서는 어느 쪽이 유럽연합의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변 필러 장관

이 질문은 유럽의 보수-자유 모델에 관한 것입니다. 윤 소장께서는 현재 유럽사회를 위한 4개의 모델-① 영국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는 미국 모델, ②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취하고 있는 북유럽 복지 모델, ③ 교회의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는 비스마르크적 사회모델인 소위 중유럽모델, ④ 개인의 복지를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지 또는 가족이 맡아야 되는 지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남유럽모델-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유럽인들이 미-영 모델을 좋아하지 않으며, 남유럽 모델을 위한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실제 유럽사회모델은 북유럽모델과 중유럽모델의 혼합형태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험체계에 기초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의 대규모투입에 의존하는 비스마르크적 모델일 수 있고, 보수적 또는 자유적 또는 자유시장 또는 자유사회 모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어떤 이름을 붙여야 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그것이 이러한 두 기본모델의 혼합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 의 김세원 박사(서울대 교수)

필러 장관께서는 문화의 脫중심화와 경제통합이 양립가능하며 때때로 보완적이기조차 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화라는 용어의 의미가 워낙 포괄적이기 때문에 문화의 어떤 측면이냐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문화는 국민감정, 민족주의, 국민제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드골주의의 경우나 또는 유럽통합에 반대하는 저항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문화가 통합의 행로에 상당한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답변 필러 장관

김 교수님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의 기초를 이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드골주의를 지적하시면서 그것이 유럽의 경제적 국제화 또는 통합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를 질문하셨는데, 실제로 그것은 방해가 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민족국가가 유럽발전의 중심으로 작용되던 과거의 일입니다.

현재 중앙유럽(Central Europe)이 문화적 脱집중화를 보이는 이유는 그것이 민족국가에 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화로서의 민족주의는 그것이 그밖의 어떤 것에 반작용을 가할 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프랑스의 드골주의 및 이전의 유고슬라비아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민족국가와 결합된 문화가 위험스러운 것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민족국가를 분열시킬 때, 즉 脱집중화시켰을 때, 문화는 그밖의 무엇인가에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그룹 또는 종교의 문화적 특성을 위한 기초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통합에 위험스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 10년동안 보아왔던 통합에 따르는 사소한 문제일 뿐입니다.